

문 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 장 엄태민 서기관 하유진	042-481-5057 042-481-572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1년 10월 5일(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0월 4일(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 ‘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 ◆ 소규모 아이스크림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상호명을 타인이 모방하여 먼저 상표 출원 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특허청의 피해신고 사이트에 민원상담을 요청하여 상표도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상표출원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으며, **상표출원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 IP담보대출을 받아 사업화 자금에 활용하던 B기업은 최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채무변제 자금이 없어 회생절차 진행(회생계획안의 법원 인가 필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특허청의 ‘**IP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특허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일정 채무를 변제해 **회생 계획의 법원 인가**를 앞당겨 경영 정상화의 첫 발을 뗄 수 있었다.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3건의 ‘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 먼저, 최우수상(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방지)으로는 빈번히 발생하는 상표 선점행위에 대해 소상공인이 자신의 상표를 지키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 ☐ 방송에서도 소개된 ‘덧죽’ 사례와 같이, 타인이 쌓아올린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모방 상표 출원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 도용이 의심되는 출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당하게 상표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원비용을 지원하였다.
- 이와 함께, 상표 도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례별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공익변리사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우수상(특허 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이 경영위기에서 회복하도록 법원, 은행과 손을 맞잡은 사례로,

-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담보로 설정된 자신의 특허권을 특허청(회수지원기구)에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처분한 특허를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회생절차 : 법원의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의 구조조정 및 채무변제 절차
 ** 회생기업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자산의 임의처분이 금지되며, 매각처 확보 및 법원 인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실상 담보 IP의 활용이 어려웠음

□ 이 밖에도 장려상(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은 ‘지재권 분쟁대응센터’를 설립하여 전 세계 특허분쟁을 미리 파악하고 우리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 특히, 소부장 분야에 대해서는 KAIST 교수 등으로 구성된 ‘특허 분쟁 기술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특화된 지원 노력이 돋보였다.

* KAIST의 기술분야 별 교수(150명)로 구성, 소부장 기업 5개社에 지재권 분쟁 위험 진단 및 기술자문을 비대면 온라인(ZOOM) 화상상담방식으로 제공

□ 김용래 특허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유진 서기관(☎ 042-481-57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방지** (상표심사정책과·지역산업재산과)

1. 추진내용

-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모방출원이 빈번한 상품류에 대한 상표 동향 분석 및 심사지침 마련
- 소상공인의 상표 관련 애로사항 상담 및 상표 권리화 지원

2. 주요성과

-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피해신고사이트 운영 및 대응방안 안내를 통해 상표선점에 따른 부당한 합의금 또는 사용료 요구 등 약 23억원 상당 피해* 구제
- * '21년 46건의 상담 진행, 건당 평균 5천만원의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한 것으로 추산
- 경기도·인천시·강원도 등의 지자체와 협업하여 상표 출원 컨설팅, 교육 및 출원 비용 지원
- * 특허청의 IP 전문성과 지자체의 인프라를 연계하는 우수 협력사례

□ **특허 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 (산업재산활용과)

1. 추진내용

-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특허 담보대출 기업이 특허 매각 요청 시 법원이 이를 신속 승인하고, 특허청 회수 지원기구가 구매하여 저금리로 재임대, 임대 종료 시까지 우선 구매권 부여

2. 주요성과

- 회생기업이 주요 자산인 담보 특허를 지속 활용하면서도 회생자금을 마련, 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어 경영 정상화 가속 기대
- * 그동안 담보 특허만 보유한 중소기업은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지 못해 파산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였음
- 회생 절차를 통해 기업파산에 이르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 막대한 R&D 비용이 투입된 특허 기술 사장 방지에 기여

□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산업재산분쟁대응과)

1. 추진내용

-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 설립, 소부장 특허분쟁 전담반 운영

2. 주요 성과

- '21.8월 379개社에 특허 분쟁 대응 지원→ 약 439억원(379개社×1.15억원*)의 경제적 효과
- * 대응전략 지원건당 수출증가 기여액 : 1.15억 (현대경제연구원)
- 분쟁 모니터링을 통해 77건의 분쟁을 특허청에서 기업보다 먼저 포착하여 초동상담, 분쟁 대응 전략을 순차적으로 지원